

제1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막

국토부 주최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항공협회 주관

1500여 명 참석...오늘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가 6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박남춘 인천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구직 희망자, 관람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업박람회는 7일까지 이틀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리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를 포함해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국내외 56여개 항공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채용설명과 현장채용을 진행한다.

박람회에 참석한 9개 국적 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정규직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일정 ▲인재상 ▲직무별 주요업무 등 심층상담을 제공한다.

제주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은 우수 상담자에게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항업무(지상조업,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항공기유도 등) 관



6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현 10여개 기업은 100여명을 현장채용할 예정이다.

또 현직 승무원의 취업특강이 열려 외국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과정과 영어면접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취업 절차, 정부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산업인력공단에서 준비한 해외

취업 특강도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각종 항공산업 취업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4차산업 기반 스마트항공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취업박람회장에 마련된 스마트항공 전시관은 9일까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우주제작산업(KAI)가 참여해 4차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항공 기술을 전시한다.

또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이 함께 운영하며 인천공항 2세대 안내로봇인 에어스타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자율비행부인항공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날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인천시 항공산업 취업지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우리시 취업지원 정책을 홍보한다.

권혁철 인천시 항공과장은 "제1회 항공산업 취업박람회가 우리시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하고 항공산업 취업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항경제권을 기반으로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항공산업 취업박람회를 비롯해 항공일자리 취업센터 운영, 인천공항 온라인 전용채용관 오픈 등 인천공항민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이재명 "사람 안 죽으면 신고 의무 없나"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 측 주장, 명백한 소방법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방력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속히 알리게 한 소방법은 엄연히 산업안전기본법과 다른 별도의 법령"이라며 "모든 법을 지켜야지 골라서 지키는 건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기본법상 신고 의무를 다했으나 소방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삼성 측의 논리는 매우 놀랍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망자가 나오기 전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 주장은 '사망사고 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고들이 수없이 많았을 대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위험의 외주화가 꽃다운 나이의 청년에게 가혹한 운명을 강요했다"며 "위험을 외주화하면서까지 기업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병원에 입원한 부상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한 부상자 가족은 "사고로 혜택을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잘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뉴스스

이어 "1%의 희망이라도 불잡으며 병원에서 날밤을 새우는 부상자 가족들을 헤아려 달라"며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조사에 임해달라"고 했다.

희생자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이 지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열하는 가족들이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분동안 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등 진상 조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오후 1시55분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동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전기설비를 접촉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을 같은 업체 동료들이 발견했다.

삼성 측은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이들을 화성 동탄의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40분만인 오후 3시 43분께 이모(24)씨가 숨지고 김모(55)씨 등 2명이 다쳤다. 김씨 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1명도 탈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뉴스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융합시설에 최대 50% 지원

경기도가 주민·기업·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지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6일 밝혔다.

도의 '에너지지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지립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유통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공공기관·민간법인·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 대상지역 관찰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뉴스스

서울시, 전기차·수소차에 친환경등급 1등급 표지 부착

표지를 보면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방호번호가 적혀 있다. 등급별로 등급숫자와 색상을 지정해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를 제작 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 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다. 등급에 따라 혜택이나 벌칙을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환경부가 4월 25일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신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다.

시는 국내 최초로 전기·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지로 표지를 부착한다.

시는 먼저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표지를 보면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방호번호가 적혀 있다. 등급별로 등급숫자와 색상을 지정해 시민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민간 전기차·수소차에도 1등급 표지가 붙는다. 10일부터 온라인 신청과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받아 붙일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달긴 안내문이 개별 우편 발송된다. 이달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흰색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등 혜택을 준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새 혜택도 올해 말까지 마련된다.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위해 도심 저개발지·유휴지 국토부에 제시

그린벨트 해제 적극 통의 곤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저개발지·유휴지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시했고, 추석 연휴 전 공식 발표를 목표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초 거론됐던 철도차량기지의 경우 이전이나 개발 등 후속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부처 한 고위 인사는 6일 "서울시가 추석 전 주택공급지 선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철도이전기지는 너무 오래 걸려 선정대상 후보군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도심 저개발지나 유휴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다른 인사는 "서울시가 이미 유휴 용지를 찾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오래된 자치구 청사나 공기업 이전 용지 등을 주택 공급 용지로 판단하고, 해당 구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미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



찰청 부지, KT 강북지역 본부에 있던 자양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광진구 청사와 함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 짚혀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용적률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움직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린벨트 보존 원칙을 우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그린벨트 보호 원칙 하에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완도군 특산품관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